12-06 (통권57호)
2012년 3월 21일

연금 시장 리뷰

경제현안
- 동향 :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이슈 : 동일본 대지진이 韓·日 경제에 미친 영향과 과제

퇴직연금
- 동향 : 2011년 건강보험 진료비 46조 2천 억원
- 이슈 : 은퇴 후 필요 노후소득 수준과 충분성
- 퇴직연금통계 : 2012년 1월 현재

세심록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증권
www.youfirst.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

□ 동향 :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실물 동향: 한미 FTA 공식 발효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 15일 양국에서 공식으로 발효됨

· **거시경제효과**: 한미 FTA발효 시 교역증대, 자원배분 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실질 GDP가 5.7% 상승, 취업자는 35만명까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수혜 및 피해산업**: 자동차·섬유산업 등은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대미 수출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나, 농축수산업·제약업은 피해가 불가피

– 이에 따라, 한미 FTA에 따라 수혜업종의 주요국 대비 경쟁력은 더욱 강화하고 피해산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지원책이 요구됨

○ 금융 동향: 외국인 채권 매도세 강화로 금리와 환율 상승

– 유로존 리스크 완화에도 미 경기회복 가능성 고조,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은 금리는 상승하고 원화가치는 하락하는 등 약세를 보임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와 외국인 매도 강화로 3월 2일 3.45%에서 3월 20일 현재 3.60%로 소폭 상승

· 원/달러 환율은 3월 2일 1,115.3원에서 3월 20일 현재 1,127.0원으로 11.7원 상승

· 코스피 지수도 유로존 리스크 완화와 외국인의 단기 투자자금 유입 증가로 3월 2일 2,034.6에서 3월 20일 2,042.2로 7.6p 상승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09	2010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3월2일	3월20일
실물지표	GDP성장률(%)	0.3	6.2	3.6	4.2	3.4	3.4	3.4	-	-
	산업생산(%)	-0.1	16.2	6.8	10.6	7.2	5.1	5.0	-2.0	-
	소비자물가(%)	2.8	2.9	4.0	4.5	4.2	4.8	4.2	3.4	3.1
	실업률(%)	3.6	3.7	3.4	4.2	3.4	3.1	3.0	3.5	4.2
	경상수지(억달러)	327.9	282.1	276.5	26.1	54.9	69.0	126.7	-7.7	-
금융지표	국고채3년물(%)	4.04	3.72	3.62	3.80	3.68	3.60	3.41	3.45	3.60
	원/달러(원)	1,276.4	1,156.0	1,107.9	1,119.8	1,083.2	1,085.1	1,143.9	1,115.3	1,127.0
	코스피지수(P)	1,682.8	2,051.0	1,825.7	2,106.7	2,100.7	1,769.6	1,825.7	2,034.6	2,042.2

주: 1) 실물지표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금융지표 중 국고채 3년물 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기간 중 평균값이며 코스피 지수는 기간말 기준임.

2) 3월 2일자 실물지표는 1월, 3월 20일자는 2월 수치임.

□ 경제 이슈: 동일본대지진이 韓·日 경제에 미친 영향과 과제

■ 동일본대지진으로 재침체된 일본 경제

한신(阪神)대지진의 약 3배 이상인 약 16~25조 엔의 피해를 가져온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1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3차에 걸쳐 약 14.5조 엔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여 재해복구비용으로 투입하여, 경기 회복을 꾀했으나 일본 경제는 2011년에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예상된다.

■ 동일본대지진이 일본 경제에 미친 영향

동일본대지진 이후 1년 동안 서플라이체인 복구가 가속화되는 등 재해복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동일본대지진의 피해가 가장 컸던 일본 동북지방 7개현의 생산거점이 빠르게 복구되고 있다. 지진이나 쓰나미에 의한 직접 피해를 받은 91개 생산거점 중 93%가 복구되었고, 이 가운데 80%가 재해 전 또는 이상의 생산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 동일본대지진의 직·간접 영향에 의한 기업 도산 건수도 감소하고 있다. 2012년 2월 7일 현재 사업정지 중이거나 파산 수속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33개사로 올 상반기까지 동일본대지진 관련 도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건수나 규모는 점차 축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기업의 해외 진출 증가로 인한 산업공동화 우려 증대, 전력 부족 현상 지속, 재정 건전성 악화 등 여전히 일본 경제의 리스크 요인들이 상존해 있는 상황이다. 먼저, 동일본대지진으로 서플라이체인에 큰 피해를 입은 일본 기업들의 해외 생산 비중 상승과 자국 내 리스크 회피 등을 위한 해외 투자 급증으로 일본 내 산업공동화 우려가 재부각되고 있다. 일본 국제협력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주요 제조업체들의 해외생산 비중은 2010년 33.3%에서 2011년에 34.2%로 상승했다. 또, 해외직접투자도 2010년 대비 약 58%나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원전의 평균 이용률이 대폭 하락, 전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동일본대지진 후 후쿠시마 제1원전 1~4호기 폐쇄 작업을 추진 중인 등 2012년 2월 10일 현재 전체 54기의 원전 가운데 2기만이 가동 중이며, 지난 1월에는 원전 평균설비이용률이 10.3%까지 하락했다. 또, 재해복구비용 증가 등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었다. 일본 정부는 동일본대지진 복구를 위해 3차례에 걸친 추경과 2012년 당초 예산까지 모두 약 17.5조 엔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와 지방의 부채 규모도 2010년 180%에서 2012년에는 196%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동일본대지진으로 일본 동북지역의 주요 관광지가 폐허가 되었을 뿐 아니라 방사선 위험 우려로 해외 관광객 유입 규모가 급감했다.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3월 일본 내 유입 외국인 관광객 수가 월간 6~70만 명대에서 30만 명대로 급감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11년에 전년대비 27.8% 감소했다.

■ 동일본대지진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한편, 그동안 한국경제는 對日무역수지 개선, 세계 시장에서의 한국기업의 경쟁력 유지 및 상승, 對日 직접투자 유입 증가, 대체 관광 유입증가, 한국형 원전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 대두 등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첫째, 동일본대지진 이후 對日 무역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2011년 한국의 對日 수출 증가율은 2010년 29.4%보다 11.4%p 증가한 40.8%, 수입 증가율은 동 23.8%p 감소한 6.3%를 기록, 전년대비 무역수지 적자가 약 75억 달러 감소했다. **둘째, 자동차나 반도체 등 국내 주요 수출 기업들의 경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일본은 지난 2011년에 생산이 전년 대비 12.7% 감소하고, 세계 생산 비중도 12.3%에서 10.4%로 낮아졌지만, 한국은 생산이 9.0% 증가하고 세계 시장 비중도 다소 상승했다. 또한, 삼성전자와 하이니스의 세계 DRAM 시장 점유율이 2011년 4/4분기 67.6%까지 상승하였고, LCD 부문에서도 국내기업의 압도적인 경쟁우위가 지속되고 있다. **셋째, 일본 내 서플라인체인 붕괴와 전력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일본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증가했다.** 2011년 1/4분기 이후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 건수가 지속 증가, 전년보다 79건 증가한 500건을 기록했다. **넷째, 일본 방사능 유출 우려감에 따른 목적지 변경 수요의 일부를 한국이 흡수하는 등 訪韓 외국인 증가로 여행수지 적자도 개선되었다.** 일본 관광 대체 수요 증가 등으로 訪韓 외국인 증가세가 가속되면서, 2011년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10년 대비 약 100만 명 증가한 약 980만 명에 달했다. **다섯째, 일본 원전 사고로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원전 폐기 등 원자력 이용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고유가, 지구온난화 대응 등으로 원전의 필요성이 재부각되면서 한국의 신형경수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 시사점

향후 일본은 원전피해를 제외하면 빠르게 복구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모색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변화된 일본 기업들의 전략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 회복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 노력과 함께 일본 내수시장 공략 가속화 등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향후에도 일본 기업들의 해외진출 가속화가 전망되는 등 **서플라이체인 대체 수요 및 투자 유입 촉진을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또,** 일본 내 자숙 분위기가 점차 약해지면서 일본 소비자들의 관광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본 관광객들의 유입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동일본대지진 후 이슈화되었던 원전의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원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등 **한국형 원전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이부형 연구위원 외(02-2072-6306, leebuh@hri.co.kr)

□ 동향: 2011년 건강보험 진료비 46조 2천 억원

(국민건강보험 3월19일 보도자료 요약)

○ 2011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46조 2,379억원으로 지난 10년간 2.5배 증가함

- 2011년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3.3%인 15조 3,768억원으로 나타남
  · 이는 전년 노인진료비 14조 1,350억원 대비 8.8% 증가한 것으로 2002년부터 10년간 평균 16.9%의 증가율을 보이며 지속적인 증가추세임

-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002년 9만4,405원에서 2011년 24만7,166원으로 2.6배 이상 증가하여 인구고령화 및 노인 의료이용의 증가 추세가 뚜렷함

<연도별 총진료비와 노인진료비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진료비	188,317	207,420	225,061	248,615	284,103	323,892	348,690	393,390	436,283	462,379
노인진료비	37,892	44,008	51,364	60,731	73,504	91,190	107,371	124,236	141,350	153,768
비율	20.1	21.2	22.8	24.4	25.9	28.2	30.8	31.6	32.4	33.3
노인월진료비(원)	94,405	103,563	114,207	129,124	150,384	173,217	194,531	214,507	236,588	247,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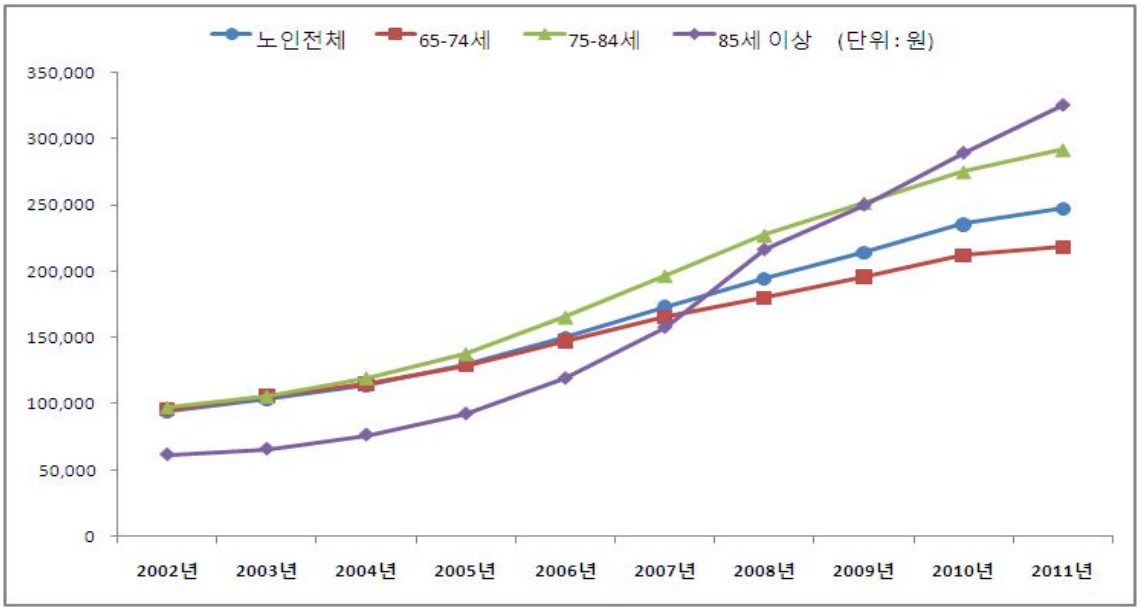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7만8,159원으로 65세 미만은 5만8,927원, 65세 이상은 24만7,166원 임
  · 2002년 수치와 비교하면 65세 미만은 101.44%, 65세 이상은 161.81% 증가하여 노년층 진료비가 비노년층 진료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음

-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 진료비를 2002년과 비교하였을 때 65~74세에서 127.81%, 75~84세에서 198.79% 증가함
  · 특히, 85세 이상에서는 427.08% 증가하여 진료비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65세 미만/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 추이>

(단위 : 원, %)

구분	2002	2005	2008	2009	2010	2011	2002년 대비 증가율
전체	33,613	43,716	60,336	67,435	74,339	78,159	132.39
65세미만	28,940	36,016	46,166	51,224	56,095	58,297	101.44
65세이상	94,405	129,124	194,531	214,507	236,588	247,166	161.81
65세~74세	95,826	128,699	179,998	195,965	212,532	218,300	127.81
75세~84세	97,609	137,918	227,213	251,730	274,946	291,645	198.79
85세이상	61,731	92,522	216,347	249,978	289,286	325,370	427.08



□ 이슈 : 은퇴 후 필요 노후소득 수준과 충분성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전통적 부양의식은 약화되는 과정에서 노후준비 및 노후소득 등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기초노령연금 급여확대 등 복지수요의 증가로 표면화되고 있지만, 복지재정에는 한계가 있어 고령화 및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후준비에 우려감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통계청(2011)에 따르면 '10 년 현재 65 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인구 중 11.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8 년에는 14.3%로 증가하여 '고령사회'가 되고, '26 년에 20%를 초과하여 초고령사회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09 년 현재 65 세 이상 고령자 중 '노후준비가 되어 있다'는 응답자는 39.0%로 매우 낮아 현 노령층의 노후대비 수준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으며, 더군다나 부양의식이 약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노인 가구의 노후의 삶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65 세 이상 고령자의 38.3%는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37.8%는 '가족과 정부.사회 공동', 18.4%는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응답함으로서 사적부양의식은 약화되고 자조나 사회책임을 강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사회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물론 공적연금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대표적인 공적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은 아직 성숙단계에 있지 못하여 수급자 수도 적을 뿐 아니라 급여수준도 많지 않은 상태여서 그 역할에 한계가 따른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국민연금의 역할이 증대하고 가구의 보유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노후에 대비한다고 할 경우 미래 노인세대의 노후준비수준은 어느 정도될 것인지를 살펴보고, 향후 노후소득보장 정책방향을 제시해 보고 있다. 즉, 현 노령계층이 아니라 고령사회에서 노인세대가 될 '미래의 노인계층'(현재의 근로계층)을 중심으로 이들의 필요 노후소득 수준을 생애소득 관점에서 추정하고 이들의 소득원에 대한 구성과 노후소득보장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향후의 소득보장 논의는 공사적 노후소득원 전체를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노후근로소득, 사적이전소득, 자산의 소득환산 등 노후에 발생할 모든 소득 및 자산을 활용할 경우 필요노후소득수준 달성 비율은 90%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자산의 소득환산 등 역모기지의 활성화 및 자산을 노후시점에서 효율적으로 유동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 사회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Ⅰ. 우리나라 고령화 추이와 노인세대의 소득원 현황

○ 고령화 추이 및 노후준비 정도

- 통계청(2011)에 따르면 **'10 년 현재 65 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인구 중 11.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8 년에는 14.3%로 증가할 전망**

  · '10년 **생산가능인구(15~64 세) 6.6 명**이 **노인 1 명**을 **부양하고,** 2030 년에는 3 명이 노인 1 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어 노년부양의 문제가 심각해 질 것으로 우려

- 고령화 추세로 인해 **국민연금, 의료비 등의 사회적 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 노령층 국민연금 수급자 규모는 높지 않은 상태임**

  · '10 년 65 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30.0%**로 '05 년(16.1%)에 비해 13.9%p 상승하였으나, 제도도입이 일천하고 고령화 과정을 고려할 때 현 노령층에 대한 연금 수급자 규모는 높지 않은 편임

  · 65 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된 의료비는 13 조 7,847 억원으로 **전체 의료비의 31.6%를 차지**하였으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

- 반면, '09 년 현재 65 세 이상 고령자 중 '노후준비가 되어 있다'는 응답은 39.0%에 불과하여 부양의식 약화를 고려할 때 현 노인계층의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가 우려됨

  · 특히, 부모부양 견해를 보면,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는 비중(**37.8%**)은 감소하는 반면, '부모 스스로 해결', '가족과 정부.사회 공동'의 비중은 증가하는 등

  · 사적부양 기능 약화와 자조 혹은 공적부양 기능 강화로 부양의식 구조가 변화되고 있음

○ 현 노인세대의 소득원 분석

- 현 노인세대(60 세 이상)의 소득원을 경상소득 기준으로 보면, 근로소득 47.5%, 사업소득 25.5%, 재산소득 1.3%, 이전소득 25.6%로 조사되어 노인세대에서도 여전히 근로소득이 중요한 소득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가구유형별로는 근로자가구는 근로소득 73.7%로 절대적으로 높았으나, 비근로자가구는 근로소득 31.4%, 사업소득 35.9%, 이전소득 30.9%로 소득원이 다소 고른 편으로 나타났음

- 한편, 고령화의 진전으로 노인세대는 근로자가구에서 비근로자가구의 성향이 강해질 것이고, 이는 비근로소득 특히,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고령화의 진행에 따른 은퇴 후 삶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연금성 소득(예, 국민연금 등)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의 노인세대는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1> 노인세대의 소득원 현황

가계수지항목별	전체			가구주 60 세이상 가구		
	전체가구	근로자가구	근로자외가구	전체가구	근로자가구	근로자외가구
가구원수 (명)	3.28	3.38	3.14	2.57	2.60	2.56
가구주연령 (세)	48.97	45.67	54.23	68.08	65.53	69.34
경상소득 (천원)	3,705 (100.0)	4,062 (100.0)	3,139 (100.0)	2,446 (100.0)	2,813 (100.0)	2,264 (100.0)
근로소득 (천원)	2,496 (67.4)	3,613 (88.9)	720 (22.9)	1,162 (47.5)	2,074 (73.7)	710 (31.4)
사업소득 (천원)	841 (22.7)	185 (4.6)	1,884 (60.0)	624 (25.5)	243 (8.7)	813 (35.9)
재산소득 (천원)	16 (0.4)	13 (0.3)	22 (0.7)	33 (1.3)	16 (0.6)	41 (1.8)
이전소득 (천원)	352 (9.5)	251 (6.2)	513 (16.3)	627 (25.6)	479 (17.0)	700 (30.9)

Ⅱ. 은퇴 후 필요 노후소득수준 및 충분성

○ 은퇴 후 필요 노후소득수준 설정 기준

- 65 세 이후의 평균소비성향*을 충족시키는 소득수준을 적정 혹은 필요노후소득수준으로 정의
  · 평균소비성향 = 가구소비/가구경상소득

- 노동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65 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을 분석한 결과 58.7%로 나타남(가구경상소득 116 만원, 가구소비 68 만원, 2008 년 기준)

- 여기서 향후에도 65 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소비성향이 평균적으로 동일할 것으로 가정하면, 미래의 노인세대의 평균소비성향도 58.7%수준으로 가정 할 수 있음
  · 따라서, 현 근로계층이 노인가구가 되는 시점인 65 세 이후에 평균소비성향이 58.7%수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 현 근로계층의 '노후소득 준비 충분성' 정도에 대한 판단 가능

<표 2> 가구주 연령대별 평균소비성향 (2008 년 현황)

연령구분 1)	가구균등화 적용		
	가구경상소득(A)	가구소비(B)	평균소비성향 (B/A*100)
30 대	215	113	(52.7)
40 대	193	129	(66.5)
50 대	202	127	(62.9)
60 대	153	88	(57.8)
70 세이상	105	63	(59.7)
65 세미만	197	119	(60.4)
65 세이상	116	68	(58.7)
전체	182	109	(60.1)

주: 1) 연령구분은 2008 년 가구주 연령기준임

○ 현 근로소득세대의 65 세 이후 노후소득원* 추정

- 생애기간을 고려하여 현 근로세대가 노인세대가 되는 노인가구의 소득원(노후소득원)을 추정한 결과,

· 현재 60 세 미만 가구주 가구의 생애평균 추정된 가구총소득(소득인정액* 개념)은 약 217 만원, 보유율은 약 93%수준

* 소득인정액 개념은 노후자산을 역모기지 관점에서 100% 유동자산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분석

· 연령대별로는 30 대 232 만원, 40 대 229 만원, 50 대 200 만원이 해당 연령대별로 65 세 이후 가구소득으로 추정

* 구성항목은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기타소득, 자산환산액임

- 연령대별로 필요로 하는 노후필요소비수준은 평균소비성향 58.7%를 고려할 때 128 만원 수준으로 추정

· 연령대별로는 30 대 136 만원, 40 대 134 만원, 50 대 117 만원이 해당 연령대별로 65 세 이후 필요한 가구소비수준으로 추정

· 출생연도별로는 75 년생 141 만원, 65 년생 138 만원, 55 년생 124 만원이 해당 연령대별로 65 세 이후 필요한 가구소비수준으로 추정

※ 해당 금액은 2008 년 기준으로 현가화한 금액이므로 할인율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장기추정으로 산출된 절대금액은 사용을 자제할 필요 있음)

<표 3> 현 근로세대(연령대별) 추정 노후소득원(65 세 이후 월평균)

(단위 : 월 만원, %)

가구주연령 (2008 년기준)	가구의 월소득 추정액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기타소득	자산환산액	가구의 월소비필요액
30 대	231.8	65.5	8.3	80.4	80.7	136.1
40 대	229.0	70.2	9.0	69.9	81.7	134.4
50 대	199.6	51.3	8.8	71.2	92.0	117.2
전체	217.1	61.3	8.8	73.0	83.4	127.5

주: 1) 비보유가구 포함한 평균치
2) 연령은 2008 년 기준시점에서의 가구주연령 기준
3) '가구총소득'은 소득+자산소득환산액 모두 합산한 값으로 가구소득인정액'이라고 할 수 있음
4) 기타소득은 65 세이후 추정한 근로소득, 자산소득, 사적이전 모두 합산한 평균
5) 자산환산액은 보유자산을 연 5%수준에서 소득환산할 경우 추정되는 월평균액

○ 연령대별(출생연도별) 노후소득원 충분성 검토

- 은퇴자금의 충분성 여부 판단

· $TC_r \leq PVA_r$: 은퇴 자산 충분

· $TC_r > PVA_r$: 은퇴 자산 불충분

* 단, TC_r = 은퇴 기간 동안 요구되는 총 소비액수의 현재가치
PVA_r = 은퇴 시점까지 축적한 자산의 현재가치

· 여기서는 TC_r 과 PVA_r 을 월평균 개념으로 전환하여 각각 '가구의 월 소득추정액', '가구의 월 소비필요액'로 비교함

- 연령별로는 젊은 연령일수록 향후 노령기 소득수준이 일정수준이상일 확률이 높아짐

· 30 대 92.4%, 40 대 79.7%, 50 대 70.6%(전체: 81.8%)

· 이는 국민연금의 성숙되고 또한 적극적인 납부를 통해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가구자산의 유동성(역모기지 활성화)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회시스템이 보장된다면, 국가재정 활용을 최소화 하면서 개인의 노후소득보장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줌

<표 4> 연령대별 추정 노후소득원 충분성 검토

(단위: %)

출생연, 가구주연령 (2008 년기준)	필요소득대체율	충분성 비율	평균소득대체율
30 대	(58.7)	92.4	98.9
40 대		79.7	75.3
50 대		70.6	69.5
전체		81.8	84.8

주: 1) 충분성 비율='$TC_r \leq PVA_r$ 인 가구수'/'해당연령대 총가구수'
2) 평균소득대체율 : '추정가구소비'/'추정가구총소득(가구소득인정액)'

Ⅲ. 고령사회에 대응한 노후준비 전략

○ 그동안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중심으로 공적소득보장 중심으로만 논의되어 왔으므로 공사적 노후소득원 전체를 고려한 검토가 필요

○ 공사적 노후소득원을 고려할 때 현행 체계 하에서도 향후 30 년 후 30 대가 노인이 되는 시점에서 노후소득원의 충분성은 90%를 넘을 것으로 추정

○ 다만, 이는 노후근로소득, 사적이전소득, 자산의소득환산 등을 고려한 분석이며,

- 자산의 소득환산과 관련하여서는 역모기지의 활성화 및 자산을 노후시점에서 효율적으로 유동화시키는 문제가 존재함

- 따라서, 복지재정으로 인한 국가채무증대가 우려되는 현시점에서 국가재정 활용을 최소화하면서 개인의 노후소득보장을 증대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가구자산의 유동성(역모기지 활성화)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활성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팀장 강성호 (02-3218-8624, Ksh0515@nps.or.kr)

□ 퇴직연금통계 (2012. 1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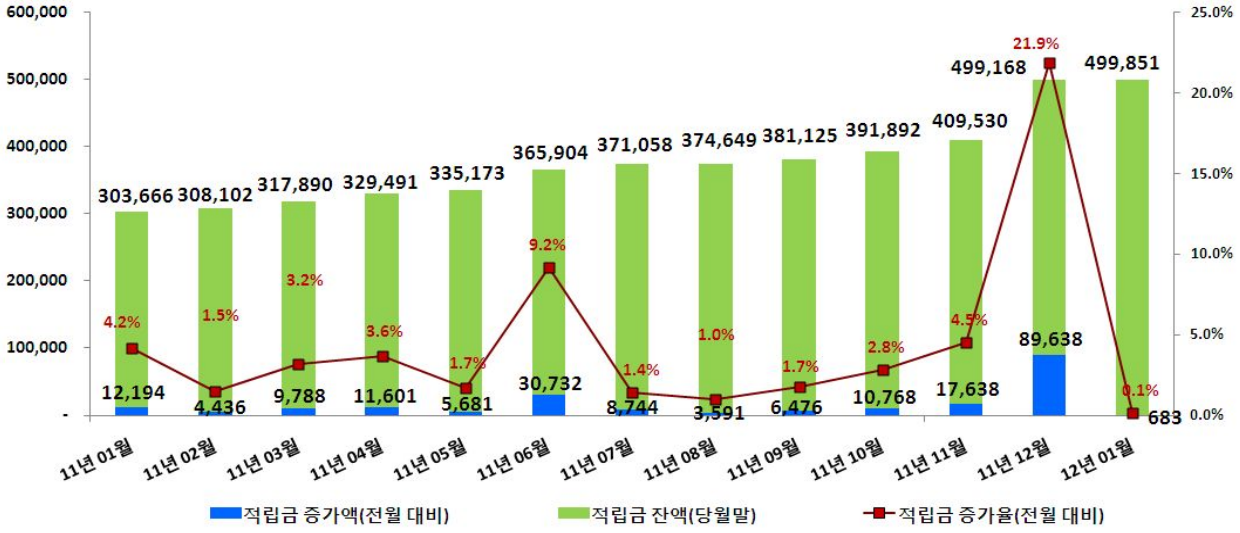
○ 적립금 규모

- 2012 년 1 월 말 현재 적립금액은 49 조 9,851 억원으로 전월말(49 조 9,168 억원) 대비 0.1%(683 억원) 증가

- 퇴직금 추계액(128.5 조 추정) 대비 퇴직연금 적립률은 35.9%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추이 >

(단위 : 억원, %)



자료 : 금융감독원

○ 도입사업장

-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는 총 141,989 개소로 전월말(139,151 개소) 대비 2.0% 증가
  全 사업장(1,507,158개소)대비 퇴직연금 도입률은 9.4%

<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

(단위 : 개소, %)

구분	10인 미만	10인~29인	30인~99인	100인~299인	300인~499인	500인 이상	합계
(A)도입 사업장수	81,496	38,027	16,346	4,442	717	961	141,989
(B)전체 사업장수	1,277,326	167,033	50,007	10,309	1,363	1,120	1,507,158
도입비율 (A/B,%)	6.4	22.8	32.7	43.1	52.6	85.8	9.4

자료 : 금융감독원

□ 洗 心 錄

□ 소프트 파워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 자질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본 상태에서 자신들의 이마에다가 알파벳 'E'를 써보라고 해보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읽는 방향으로 'E'라고 쓴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가 읽는 방향으로 'E'를 거꾸로 쓸 것이다. 이 실험은 타인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자의식 테스트이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켈로그경영대학원의 애덤 갤린스키는 이 실험을 통해 권력과 감정이입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약간의 권력이 부여되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E'자를 쓰지 않으려는 자기중심적 성향을 강하게 나타냈다. 즉 권력은 다른 사람의 시각과 사고, 느낌을 이해하려는 감정이입의 경향을 낮춘다.

CEO들은 행동지향성과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동안 가장 인간적인 특징인 상대방 관점에서 보는 감성이입을 희생시켜 왔다. 물론 CEO가 감정이입에 너무 몰입하면 결국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충분한 감정이입이 되지 못한 행동은 두 가지 문제를 초래한다. 하나는 부하들이 리더가 결정한 행동을 따르지 않게 되어 결국 일의 진행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지못해 따르는 수동적인 행동을 초래하는 것이다.

미래 세상은 개념과 감성이 강조되는 소프트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예술적, 감성적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하이컨셉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하이터치 재능이 무척 중요해지고 있다. 요즈음 CEO들은 감정이입된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인문학 강좌가 성행하고 있는 것도 그 한 이유이다. 미래 CEO에게는 행동 지향성과 함께 감정이입의 재능도 요구한다. 여러분은 현재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수레바퀴가 없이도 훌륭했던 사회는 존재했다.
그러나 스토리가 없었던 사회는 존재하지 않았다."

어슐러 크로버 르 귄(1929~) : 미국 작가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HRI 리더스포럼은 CEO들을 위한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입니다.

[HRI리더스포럼 혜택]

- 경제·경영부터 인문사회에 걸친 다양한 주제강연
- CreativeTV(usociety.co.kr)VVIP멤버십 제공
- 경제·경영도서 베스트셀러 제공(年 12권)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 리더십교육프로그램 참여기회 마련
- 경제핫이슈분석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연회비]

■ **1명** : 연100만원 ■ **3명** : 연200만원 ■ **5명** : 연300만원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시간 19:00~21:00(2h)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민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유홍준 명지대 교수(명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김정운 명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HRI리더스포럼 사무국

· Tel. 02-2072-6246, 6247 · Fax. 02-2072-6249 · E-mail. foru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